

행락철 무질서에 몸살 앓는 단풍 명소

내장산·원효사·지리산 등 호객·흡연·불법주차 극심 사람·차량 뒤엉켜 위험...시내버스 통행 막혀 소동도

2일 오전 10시께 찾아간 내장산국립공원 원은 탐방객과 관광버스, 노점상 등이 뒤엉켜 무질서한 모습을 보였다. 평일 오전 시간대임에도, 단풍철을 맞아 제1~2주차장은 '민차'라는 안내판이 걸려 있었다.

이 때문에 내장산국립공원 탐방로 곳곳을 불법주차 차량이 점령, 탐방객의 통행 방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었다.

이와 함께 내장산 국립공원 입구에선 식당 업주들이 경쟁적으로 호객행위 나서면서 소모자를 가두는 등 구경에 나선 탐방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립공원인 내장산은 전체가 흡연금지 구역임에도, 담배를 피우는 탐방객의 모습도 목격됐다.

내장산을 찾은 한 탐방객은 "조용한 가을산행을 기대하고 왔는데, 평일인데도 너무 무질서한 모습"이라며 "단풍이 아무리 예뻐도,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간 '애기단풍'으로 유명한 백양사 진입로와 광주 무등산 원효사 지구 일대도 극심한 차량정체를 빚고 있었다.

장성군 북하면 증평리사거리부터 백양사 매표소까지 1.8km 구간은 차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했으며, 일부 운전자들은 정체가 화가 난 듯 수시로 경적을 울려댔다.

무등산 원효사 구간은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1187번 시내버스가 곡선 구간을 돌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불법주차 차량이 2중 주차를 하면서 왕복 2차선 도로를 점령, 양방향 통행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또 무등산 증심사 지구는 일부 등산복

가게들이 내놓은 간판과 물건들이 인도를 모두 차지하면서 탐방객이 차도로 걷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지리산도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갖길 불법 주차차 때문에 큰 혼잡이 빚어지고 있었다. 특히 주말이면 천은사 입구에서 성삼재로 오르는 2차로 구간에서는 등산객이 갖길에 세워놓은 불법차량 때문에 병목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등산·관광객들은 뒤엉킨 차량 사이로 곡예 하듯 도로를 건너는 게 일상이 됐다.

이처럼 지역대표 단풍관광지들이 각종 불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지자체와 관할경찰,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내세워 계도에만 치중하면서 단풍 관광지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탐방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일 무등산·내장산 등 광주, 전·남북 지역 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탐방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각 공원별 탐방객 수를 살펴보면 무등산은 ▲8월 23만7570명 ▲9월 22만6912명에서, 10월 들어 34만3253명으로 9월 대비 51%나 증가했다.

내장산도 ▲8월 7만4185명 ▲9월 6만8398명에서 10월에는 전월보다 두배 이상 많은 13만7720명이 방문했다. 특히 백양사 등이 있는 내장산 백양사사무소는 울 들어 탐방객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10월 기준 19만1123명이 방문했다. 지난해는 같은 기간 7만7701명이 찾았다.

불법행위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한 달간 불법주차 단속을 펼쳐 24건을 적발했다.



2일 내장산국립공원내 인도가 노점상들이 설치한 천막에 가로막혀 등산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아래는 내장산 입구에 있는 음식점 업주들이 탐방객의 차를 가로막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

내장산은 흡연 문제가 심각했다. 지난달 단속 결과 48명이 흡연을 하다가 단속을 받았으며 흡사 3건, 애완견 동행 1건 등이 단속됐다. 다만 불법주차는 계도 위주인 탓에 과태료 3건 부과에 그쳤다.

화순·담양 일대를 담당하는 무등산 동부사무소는 지난달 셋길 출입금지 위반으로 11명에게 지도장을 발부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시 노조 전공노 가입 투표 '무혐의'

"노조 고유 활동...위법성 없다" 검찰, 불법현수막은 약식기소

검찰이 광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 투표는 노조의 고유 활동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투표 중단, 온라인 투표 등 투표 과정도 독자 행위로, 관련 법규가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행사부 고발에 따라 광주시 공무원 노조가 지난해 4월 광주시청에서 실시한 전공노 가입 투표가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조합원 11명의 징계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 관공서 청사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걸어 행사부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광주시와 광주 5개 구청 공무원 노조 조합원 10명도 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노조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조 내부 의사결정 행위인 만큼 공무원법상 금지되는 집단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투표 중단, 온라인 투표 등 투표 과정도 독자 행위로, 관련 법규가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행사부 고발에 따라 광주시 공무원 노조가 지난해 4월 광주시청에서 실시한 전공노 가입 투표가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조합원 11명의 징계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 관공서 청사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걸어 행사부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광주시와 광주 5개 구청 공무원 노조 조합원 10명도 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중 유학생에 결혼·사업 빚자 거액 가로챈 30대 구속기소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김석우)은 2일 "결혼과 함께 사업자금 등을 빌미로 중국 국적의 여대생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강모(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광주지역 모 대학에서 유학중인 중국 국적의 20대 여대생 A씨로부터 지난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9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강씨에게 건넸으며, 암 투병중인 A씨의 아버지는 자신의 항암 치료비 등을 팔아도 보낸 탓에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광주에 있는 A씨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로부터 A씨의 피해금을 환수하기 위해 수사 중이며, 아직까지 환수된 돈은 없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산하기관 여직원 성추행 혐의 광주시 간부공무원 약식기소

광주시 간부 공무원이 해외출장 중 산하기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용규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광주시 공무원 A(4급)씨를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식 재판 대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같은 혐의를 받은 직원 B(6급)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대만 출장 중 동행한 산하기관 여직원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음담패설을 하고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추행하는 것을 보고도 방관하는 등 공모한 혐의다. 한편 광주시는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두 공무원을 직위해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기무사, 1996년 전두환 재판 때 5·18 기밀자료 모두 소각

민주당 이철희 의원 문건 공개

참모장실 자료 파기 경위도 확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당시 5·18 관련 기밀자료를 모두 소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일 기무사가 2002년 1월 사령관 보고용으로 작성한 '5·18 및 계엄관련 자료 추적 조사 결과'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5·18 관련 자료의 파기 경위를 기록한 것이다. 군이 조직적으로 5월 관련 자료를 폐기한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이 문건은 문두식 당시 기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작성했으며 2001년 12월 26일부

터 다음해 1월 9일까지 실시된 5·18 관련 자료 보존실태에 대한 내부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문건에서는 '5·18 및 계엄 관련 자료가 전무(全無)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기무사 각 처·실 가운데 '중보'(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기무사 중요 첩보) 담당 업무를 맡았던 부서들은 '목록은 보관하고 있지만 관련 자료(원문)는 없다'고 보고했다.

특히 3처는 '1990년 윤석양 사건지 존안 문서 폐기 지시와 1993년 3차장 지시로 각 각 원문과 5·18 관련 광디스크 2개를 사령부 소각장에서 파기했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보고했다.

문건 마지막 '분석 및 조치의견'에서는 "1980년 초 시국관련 중요문서는 M/F(마이크로 필름), 광디스크 등에 수록되지 않

고 지휘부에서 관리하다 80~90년대 혼란기를 거치면서 전량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결과를 요약했다.

또한 소문으로 떠돌던 기무사 '참모장실 보관자료' 존재 여부와 파기까지의 구체적 경위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5·18 관련 민감 자료는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재입했던 정도영 참모장의 주도로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참모장은 해당 자료를 은밀히 보관하기 위해 기무사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서울 소재 210부대 지하방커로 옮겼으며 나무상자 8개에 담고 칸막이까지 쳐서 폐쇄조치했다.

문서에서는 "이 자료들은 1996년 11월 임재문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주상식 검찰 실장이 직접 소각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60대 부부 숨진 채 발견

광주시 북구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가 숨진 채로 발견돼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광주북부경찰은 2일 "이날 오후 5시께 광주시 북구 장모(64)씨의 자택에서 장씨와 아내 김모(64)씨가 숨져 있는 것을 자녀가 발견, 112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의 아들은 경찰조사에서 "이를 동안 부모님이 연락이 되지 않아 찾아가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아들이 찾아갔을 당시 장씨는 거실에서, 아내 김씨는 안방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김씨의 몸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으며, 장씨는 특별한 의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침입흔적이 없는 것을 토대로 장씨와 김씨의 사망 원인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제 버릇 못버리고 또...고속버스터 잠든 여성 더듬다 징역형

○"법원이 광주~전주행 고속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의 몸을 몰래 더듬

고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

○2일 전주지법 형사2부에 따르면 김모(51)씨는 지난 5월 11일 오후 4시 50분경 광주발 전주행 고속버스 안에서 잠이 든 A(여·23)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졌는데, "반바지를 입은 A씨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는 것.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14년도 추행죄로 6개월간 수감되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과 징역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판부는 "적축도착증 등 병적 증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고 판시.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

부동산 투자 !
최 선 규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오천경매 H. 010-3605-5000